

auri brief.

건축도시공간연구소

No.215 2020.07.30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심경미 연구위원, 장민영 부연구위원, 이해원 연구원

● 요약

- 도시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이 되는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에 대하여 장소 중심의 종합적 디자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공공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민간전문가 제도를 도입
- 영주시(2009), 서울시(2012)에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였고, 국토교통부의 지속적인 지원사업 운영을 통해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점차 증가하면서 2019년 7월에는 제도의 운영에 도움이 되는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
- 2020년 5월 3일 기준 전국 40개 지자체에서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 중(도 5곳, 특·광역시 5곳, 시·군·구 30곳)으로 이 중 8곳은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만, 10곳은 공공건축가만 운영하고, 절반 정도가 2019년에 제도를 도입
- 제도 운영에 있어 공무원 인식 부족에 따른 초기 단계 업무 수행의 어려움, 전담인력 확충 및 실무전담 부서 신설의 어려움,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업무 수행과 관련한 조직 설치와 위상 확립을 위한 운영체계 마련의 어려움 등이 한계로 나타남

● 시사점

- 제도 인식 개선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교육과 성과 공유를 위한 홍보를 지속할 필요
- 여러 유형의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는 선행사례 발굴 및 공유, 선도모델 구축 필요
-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 제시만으로 실행이 어려운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위상정립 문제, 지원인력 및 전담부서 신설 문제, 건축정책위원회 설립 문제 등 근본적 한계 극복을 위한 상위 차원의 제도 개선 필요
- 도시 규모별 민간전문가 역할 및 업무에 대한 차별화, 공공건축심의위원회나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와 민간 전문가 관계 등과 관련한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 주제어 | 민간전문가, 총괄건축가, 총괄계획가, 공공건축가, 건축기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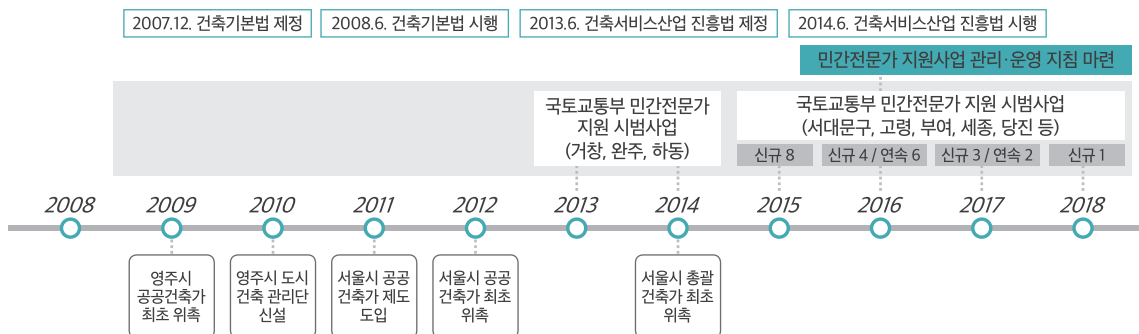
①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 배경 및 추진 과정

●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 배경

-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 부재로 각 지역에서 유사 사업이 중복 추진되거나 시설 간 연계 확보의 어려움, 과대 설계나 잦은 설계 변경에 따른 예산 낭비와 디자인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
- 민간전문가 제도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개별 시설물의 소관 부서 간 칸막이식 행정을 연계·조정하고, 부처 또는 부서 중심이 아닌 장소 중심의 종합적인 디자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
 - 민간전문가 제도는 각종 공공사업의 효과적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가 참여·행정의 지원이라는 ‘협력적 디자인 관리체계’를 토대로 행정에 민간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기획단계를 강화하고, 발주단계 지원이나 설계 및 시공단계의 품질 확보, 유지·관리의 체계적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 민간전문가 제도 추진 과정

- 2007년 12월 「건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의 수행 과정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고(법 제23조), 시행령에는 자격 기준 및 업무범위, 보수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시행령 제21조)
- 제도 제정 이후 영주시가 2009년에 국내 최초로 민간전문가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이후 서울시가 2012년에 공공건축가를, 2014년부터 총괄건축가를 위촉하여 운영 중
- 한편 국토교통부는 민간전문가 제도의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3년에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2015년부터 현재까지 지원사업을 추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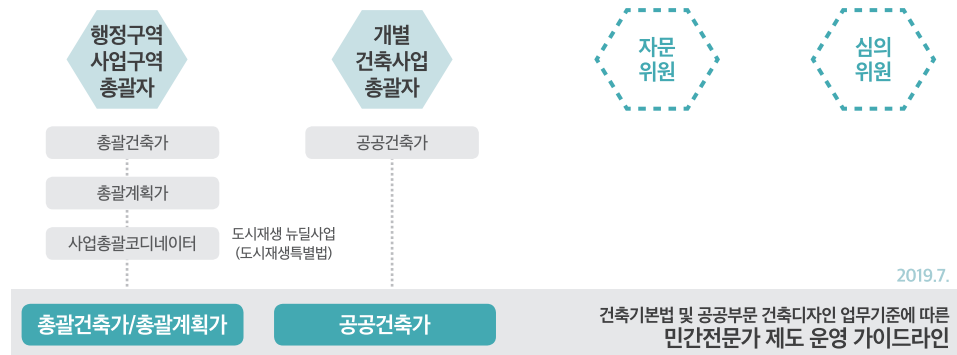


국내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 운영 연혁

출처 : 심경미 외. (2019). 지역총괄계획가 제도 확산을 위한 지원모델 구축 및 홍보방안 마련 연구. 국토교통부. 18 참고 재작성.

● 용어의 이해

- 현재 「건축기본법」에 의한 법정용어는 ‘민간전문가’로 통칭되고 있으나, 관련 매뉴얼 및 지자체 조례 등에서 민간전문가를 일컫는 명칭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
 - ‘지역총괄계획가’, ‘사업총괄계획가’, ‘분야별 전문가’,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등
- 국토교통부는 2019년 7월 「건축기본법」 및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따른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¹⁾을 배포하면서, 민간전문가를 일컫는 용어를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공공건축가’로 구분하여 통칭하는 것으로 정리함
 - ‘민간전문가’란 공공기관의 장이 총괄건축가 또는 총괄계획가 등의 직명으로 위촉한 건축 및 건축 관련 분야 전문가
 -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란 행정구역 및 사업구역의 공간정책 및 전략 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 사업의 기획·설계 및 시행과정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전문가
 - ‘공공건축가’란 개별 건축사업에 대하여 기획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민간전문가



민간전문가 구분 및 유사 용어와의 관계

출처 : 저자 작성

- 해외에서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를 일컫는 명칭은 도시별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으며, 명칭 자체보다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네덜란드 도시별 민간전문가 관련 명칭

도시명	명칭	
덴하흐, 아센, 암스텔베인, 메르스포르트	Stadsarchitect	도시총괄건축가
엔스헤데, 하를럼	Stadsstedenbouwer	도시마스터빌더
아른헴	Stadsbouwmeester openbare ruimte	공공공간 및 도시마스터빌더
흐로닝겐	Supervisor stedenbouw Stadsstedenbouwer	도시개발 총괄기획자 도시마스터빌더

출처: 심경미 외. (2019). 지역총괄계획가 제도 확산을 위한 자원모델 구축 및 홍보방안 마련 연구. 국토교통부. 58-59 참고 재작성.

②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¹⁾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정부는 2019년 4월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이행방안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발표하였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나 어촌뉴딜300사업 등에서 공공건축가를 위촉·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에 따르면 민간의 전문성 활용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도시 전체를 바라보는 통합적 시각에서 지역 내 개별 건축물의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는 기본방향을 제시
 -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는 공공건축물의 설계지침 수립 및 자문 등을 위해 공공건축가를 코디네이터로 위촉하였으며, 지자체와 현장 상황에 따라 센터장이 겸무할 수 있도록 함
-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증가하면서 제도의 운영에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 제공의 필요성이 대두됨
 - 민간전문가 제도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은 국토교통부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작성된 ‘건축·도시디자인 및 경관향상을 위한 민간전문가 참여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 매뉴얼(2013)’이 있으며, 2015년부터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관리·운영 가이드라인(안)’이 매년 작성되고 있음
 - 지원사업의 가이드라인은 사업대상지에만 적용되도록 한정되어 있고 모니터링 기관의 사업관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대상지 외 지역에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존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하여 공공기관이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활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건축기본법」 및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따른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2019.7)

●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의 개요

- 본 가이드라인은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총론(1장),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업무 및 운영(2장), 공공건축가의 업무 및 운영(3장), 민간전문가 운영체계 및 공공기관 준비사항(4장)으로 구성됨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등의 공공기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에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활용하려는 경우에 적용함

1) 국토교통부(2019). 「건축기본법」 및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따른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참고 재작성

●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민간전문가의 구분 및 참여 권장 대상사업 명시

- 앞의 용어 정의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민간전문가의 유형 내지는 명칭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던 것을, 본 가이드라인에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공공건축가로 구분하여 통칭하는 것으로 정리함
- 민간전문가는 공공기관의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 기획·설계, 개선사업에 참여를 권장하고, 건축·도시 관련 법령²⁾에 의한 사업, 어촌뉴딜300사업과 같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주요 정책사업 및 시범사업,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주요 지원사업 및 시범사업 등 구체적인 참여 사업을 명시함

•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업무에 대해 시·군·구 단위와 도·특·광역시 단위로 구분하여 구체화

- 시·군·구 단위와 도·특·광역시 단위에서의 업무와 역할은 대부분 동일하나, 시·군·구 단위에서는 장소 기반의 통합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을 하나의 업무로 포함하여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을 파악하고 이를 강화·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개발 및 사업 추진을 담당
- 도·특·광역시 단위에서는 관할 지역 내에서 민간전문가를 운영하지 않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공공건축가를 파견하는 운영지원 업무가 중요할 수 있으며, 시·군·구 단위의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정보 제공 등 지원도 중요

• 공공건축가의 업무에 대해 구체화

- 공공건축가는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기획단계 참여·자문, 주요 공공사업의 조정·자문, 공공건축물 설계업무, 그밖에 각종 계획 및 사업 관련 심의·심사, 다양한 가이드라인 및 조례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

시·군·구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업무

구분		주요내용
1	비전 수립 및 기획 지원	- 건축·도시 관련 정책 검토 및 지자체 여건 분석, 비전 및 미래상 수립 자문 - 건축·도시 관련 사업/정책 발굴 및 기획 지원 - 중앙부처 공모사업 발굴 및 기획 자문, 공모사업(안) 검토 및 자문
2	통합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통합마스터플랜 수립 대상지(중점추진권역) 검토 및 선정 - 통합마스터플랜 사업추진체계 및 과업지시서 검토, 계획 수립 총괄
3	건축·도시 관련 사업 총괄 조정 및 자문	- 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중요사업 총괄 조정 및 자문 - 사업 간 통합적 연계 또는 협력적 관계 구축 마련 및 운영 참여 - 건축·도시 관련 법정/비법정계획 간 일관성 확보를 위한 자문, 조정 - 건축, 도시, 디자인, SOC 사업 유형별 관련 기준, 지침, 조례 검토 및 자문 ※ 지역건축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심의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총괄
4	사업발주방식 검토·지원	- 발주방식 등 사업체계 검토, 개선 및 구축, 자문 -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및 사업 관리·자문 -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의무대상 확대: 설계비 1.0억 원 이상(2020.1.16. 시행)

2) 「건축기본법」, 「건축법」, 「경관법」,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 「도로법」, 「농어촌정비법」 등

구분		주요내용
5	공공건축가 운영 지원	- 공공건축가 운영체계 마련 지원, 선정 등에 참여 - 공공건축 관련 정보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6	건축도시문화 진흥 지원	- 건축도시문화 진흥 관련 전시 및 행사 기획, 선진사례 답사 등 주민 교육
7	기타	- 지자체장의 역할로 규정된 업무 및 지자체장의 요청하여 협의한 업무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건축기본법」 및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따른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3.

도·특·광역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업무

구분		주요내용
1	비전 및 미래상 설정 지원	- 건축·도시 관련 정책 검토 및 지자체 여건 분석, 비전 및 미래상 수립 자문 - 건축·도시 관련 사업/정책 발굴 및 기획 지원
2	건축·도시 관련 사업 총괄 조정 및 자문	- 시·군·구와 동일
3	사업발주방식 검토·지원	- 시·군·구와 동일
4	공공건축가 운영 지원	- 공공건축가 추천 및 운영 지원(교부금 지급 사업에 공공건축가 참여체계 마련) - 공공건축 관련 정보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로의 공공건축가 추천 및 파견 지원 - 공공건축가 교육 지원
5	건축도시문화 진흥 지원	- 건축도시문화 진흥 관련 전시 및 행사 기획 - 시·군·구 단위 민간전문가 제도 및 운영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시·군·구 민간전문가 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의 지원
6	기타	- 지자체장의 역할로 규정된 업무 및 지자체장의 요청하여 협의한 업무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건축기본법」 및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따른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4.

공공건축가의 업무

구분		주요내용
1	건축·도시 기획업무 참여	-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기획업무 참여 -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 기획단계 자문
2	건축·도시 주요 공공사업 조정 및 자문	- 개별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 조정, 자문 -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 자문 - 국가정책사업(어촌뉴딜300사업, 생활SOC사업 등)의 조정, 자문 - 각종 정비계획* 수립의 조정, 자문
3	공공건축물 설계업무 참여	- 공공건축물 설계업무 참여 ※ 본인이 기획 또는 자문한 프로젝트의 설계에는 참여할 수 없음
4	기타	- 심의 및 심사 참여 - 다양한 가이드라인 및 조례 등 마련에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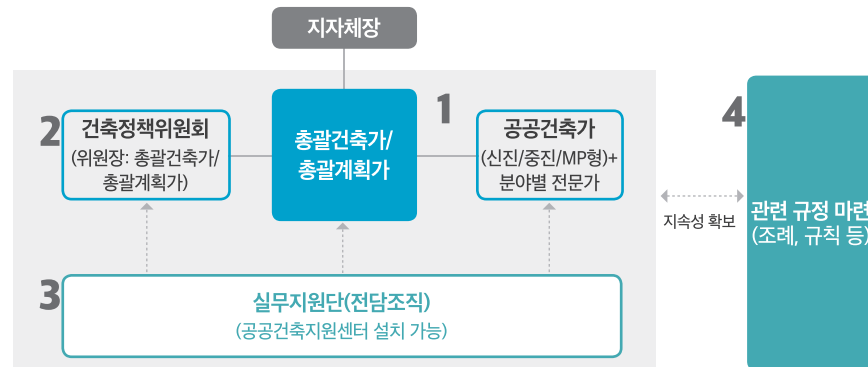
*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도시개발사업 등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건축기본법」 및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따른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7.

• 민간전문가 운영을 위한 운영체계와 지자체 준비사항을 명시

- 민간전문가의 위촉을 기본으로 건축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실무지원단의 구성, 조례 제정 등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
- (민간전문가 위촉)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를 부(副)기관장급 지위로 위촉, 공공건축가는 1인 이상 위촉을 권장하며 필요시 공공건축가 외 특정 분야 전문가의 별도 위촉 가능

- (건축정책위원회 설치·운영) 건축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로 위촉하여 운영할 것을 권장
- (실무지원조직 구성)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업무 지원, 지역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공건축가 운영 및 관리, 설계공모 운영 등을 위한 실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 (관련 규정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교체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축기본조례’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도록 함



민간전문가 운영체계

출처: 심경미, (2019). 민간전문가 제도의 이해. 총괄건축가 제도 설명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32.

③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현황 및 한계

● 지자체 운영 현황³⁾ 및 규모: 총 40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2020.5.3. 기준)

- 도·특·광역시 10곳(약 59%), 시·군·구 30곳(약 13%)으로 총 40곳에서 운영
-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를 모두 운영하는 지자체는 22곳,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만 운영하는 지자체가 8곳, 공공건축가만 운영하는 지자체 10곳
 - 도(5곳) : 충남, 전북, 경남, 제주, 경북(경북은 총괄건축가만 운영)
 - 특·광역시(5곳):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인천(인천은 공공건축가만 운영)
 - 시·군(25곳): 경기 5곳, 강원 2곳, 충남 2곳, 전북 1곳, 전남 1곳, 경북 4곳, 경남 10곳
 - 구(5곳): 서울 서대문구, 서울 강동구, 서울 은평구, 인천 서구, 대구 수성구

3) 「건축기본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전문가(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공공건축가)를 대상으로 함. 참고로 행정 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서울시 교육청, 한국철도공사 3개 공공기관 및 어촌뉴딜300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과 같은 부처 개별 프로젝트에서도 민간전문가가 활용되고 있음.

-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총 796명
 -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30명, 공공건축가 766명⁴⁾으로, 이 중 서울특별시 공공건축가가 265명, 부산광역시 공공건축가가 42명

지자체 민간전문가 운영 현황(2020.5.31. 기준)

(단위: 개)

구분	전체 지자체 수*	민간전문가 운영 지자체 수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총괄건축가만 운영	공공건축가만 운영
도·특·광역시	17	10 (약 59%)	도	5	4	1
			특·광역시	5	4	0
시·군·구	226	30 (약 13%)	시·군	25	13	4
			구	5	1	3
합계	-	40	-	40	22	8

*주 : 행정안전부. (2019).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 4 참고.

지자체 민간전문가 위촉 현황(2020.5.31. 기준)

구분	전체 지자체 수*(개)	민간전문가 운영 지자체 수(개)		총괄건축가 인원(명)	공공건축가 인원 (명)	합계(명)
도·특·광역시	17	10 (약 59%)	도	5	141	146
			특·광역시	5	430	434
시·군·구	226	30 (약 13%)	시·군	25	168	185
			구	5	27	31
합계	-	40	-	40	766	796

*주 : 행정안전부. (2019).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 4 참고.

● 도입 시기 및 운영 기간: 절반 정도가 도입한 지 1년 미만

- 가장 초창기에 본 제도를 도입한 경북 영주시(2009)는 10년 이상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2012)도 9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음
- 서울 서대문구(2015)와 충남 부여군(2016)은 국토교통부 지원사업을 계기로 본 제도를 도입하여, 이후 자체 예산으로 현재까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이들 지역을 제외하면, 2019년 제도를 도입한 지역이 전체의 절반(약 52.5%)을 차지하고 있어, 본 제도를 도입한 지 1년 미만인 곳이 많은 상황

4) 서울시 마을건축가는 총 248명(마을건축가 MP 25명, 마을건축가 223명)이 위촉되었으나 현재 구 단위에서의 운영 및 역할 등이 정립 중인 관계로 제외하였음. 이 가운데 98명은 현재 서울시 공공건축가와 중복됨.

지자체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기간 현황(2020.5.31. 기준)

(단위: 개)

구분	1년 이상	6개월~1년 미만	6개월 미만	합 계
도	2	2	1	5
특·광역시	4	0	1	5
시·군	9	10	6	25
구	4	0	1	5
합계	19(47.5%)	12(30.0%)	9(22.5%)	40(100.0%)

출처: 저자 작성

● 제도적 기반(조례) 마련 현황: 19곳 조례 제정, 21곳 내부 방침 마련

- 민간전문가를 위촉·운영하고 있는 40개 지자체 중 19개소에서 민간전문가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신설(10)하였거나, 기존의 관련 조례를 개정(9)
- 나머지 21곳은 지자체 내부 방침으로 제도를 운영 중
- 제도적 기반 마련은 본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한 기간과 특별한 관련성은 없으나, 최근 제도적 기반을 먼저 마련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음

지자체별 조례 등 마련 현황(2020.5.31. 기준)

(단위: 개)

구분	제도 마련			제도 없음	합계
	조례 제정	기존 조례 일부 개정			
도	-	3	3	2	5
특·광역시	-	5	5	-	5
시·군	8	1	9	16	25
구	2	-	2	3	5
합계	10	9	19	21	40

출처: 저자 작성

● 일부 지자체는 특정 분야의 총괄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전문가 운영

- 서울 강동구의 경우 도시경관 분야 총괄 역할을 하는 ‘도시경관총괄기획가’를, 전북 전주시는 재생 분야 총괄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재생 총괄계획가’를 운영 중
- 전북 전주시는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주거지재생 총괄계획가를 위촉(2019.7.)하였고, 기존 역할에 도시재생 분야의 업무를 더하여 지역의 전반적인 재생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2020년 5월 지역재생 총괄계획가로 위촉

● 제도 운영의 한계점 및 최근 여건 변화

- 민간전문가 제도에 대한 지자체 관련 공무원들의 인식 부족에 따라 초기 단계 업무 수행의 어려움 발생

-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공공건축가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담당부서 외에 건축 및 도시 관련 타 부서와 업무내용 공유와 업무 협조가 필수적이나, 본 제도에 대한 관련 부서 관계자들의 이해 부족으로 초기 단계 업무 수행에 어려움 발생
- 해당 지역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부서 공무원 대상 워크숍·포럼 등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자체장이 주최하는 간부회의 등을 통해 논의
- 국토교통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도 공무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정기교육,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
- **담당부서 지원인력의 업무부담 가중과 종합적·체계적 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확충 및 실무전담부서 신설의 어려움 상존**
 - 제도 운영을 위해 담당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 기록 및 관리, 모니터링, 수당 지급 등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공공건축가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해서는 공공건축가 참여사업과 활동사항에 대한 사전검토와 모니터링, DB 구축, 교육 및 워크숍 개최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그밖에도 지역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검토 및 자문 요청에 관한 사항,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부서 간 업무 협의 및 공유에 관한 사항 등 업무가 추가됨
 -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민간전문가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는 미비한 상황으로, 담당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본 가이드라인 등에서 전담인력 확충 또는 실무지원조직 신설을 권장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담당공무원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또는 규정 마련이 필요함
-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관련 조직 설치 및 위상 확립을 위한 운영체계 마련의 어려움**
 -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건축 및 도시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 조정, 자문하는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정 위원회인 시·도(광역시) 및 시·군·구(기초) 건축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로 위촉하도록 권장하여 그 권한과 위상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건축기본법」상 건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축정책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음
 -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위상에 대해서는 부자치단체장급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대부분 자문기구로서 민간전문가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위상도 직급 및 행정체계, 보수체계 등에 있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한계 발생
- **최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와 민간전문가 간의 관계 설정, 관련 부서 간 협조체계 마련에 대한 새로운 과제 대두**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2019.12.19. 시행)으로 건축기획 심의기구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건축위원회와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규정, 건축기획 사전검토 업무를 지역에서 수행할 수 있는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됨
-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공공건축사업 기획단계 강화, 발주방식 체계화 등 공공건축의 디자인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소관부서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소관부서(건축과)가 동일할 필요
- 최근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하는 부서가 건축과 외에 도시재생, 도시디자인, 도시경관 관련 부서 등 다양해지고 있음
- 민간전문가 운영 지원부서와 공공건축가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부서가 다를 경우 지역 건축정책 및 사업기획 내용의 일관성 확보의 어려움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연계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
- 도, 특·광역시, 시·군, 구 단위별로 지역 여건을 고려한 민간전문가 업무 수행을 위한 선행참고사례 또는 세부적인 가이드 부재
 -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에서는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역할 및 업무범위에 대해 처음으로 시·군·구 및 도, 특·광역시로 구분하여 이전보다 세부화하여 명시
 - 그러나 최근 많은 지역에서 제도를 도입하면서 도와 특·광역시의 업무내용의 차별화, 시·군·구에서도 도시 규모별 업무범위 및 내용의 차별화 필요성 등이 제기됨
 - 본 제도를 오랜 기간 운영해 온 지자체가 서울특별시와 영주시 2곳으로 한정되어 있어, 여러 유형과 다양한 규모의 지자체가 참고할 만한 선행사례 및 선도모델 부족
 - 특히 안정화된 모델보다는 초기 운영체계 및 업무수행체계, 안정화되기까지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상황과 해결 과정, 구체적 업무수행 활동과 내용 등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기회 마련 필요

4 시사점

● 제도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교육과 성과 공유·홍보 지속

- 지자체 차원에서는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 관련 공무원 및 지역 건축사들 대상의 워크숍, 포럼 등을 개최, 제도의 취지와 개념, 타 지역 사례 등을 공유
- 국토교통부 및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등 국가 차원에서는 공무원·건축사 대상 정례교육, 광역 단위 설명회 개최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
- 관련 정보 및 성과 공유, 애로사항 및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을 위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관련 설명자료 및 우수사례집 등 다양한 홍보물을 발간·배포

● 여러 유형의 선행사례 발굴 및 선도모델 구축, 제시

- 최근에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과 규모의 지자체들의 운영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참고할 만한 선행사례를 발굴하고, 특히 제도 운영 초기 단계부터 안정화 단계까지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선행사례 구축
- 발굴한 선행사례들을 분석하여 도시 규모별 또는 지역 특성별로 참고할 수 있는 선도 모델을 구축하여 제시

● 제도 운영과 관련된 근본적인 한계점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

-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 제시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위상 정립 문제, 지원인력 및 전담부서 신설 문제, 건축정책위원회 설립 문제 등 근본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상위 차원의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지역공공 건축지원센터와 민간전문가 간의 관계 설정 문제에 대한 세부 가이드 제시
 - 공공건축심의위원회와 공공건축가 관계 설정,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와 민간전문가 관계 설정 등
- 도시 규모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역할 및 업무범위를 세부화하여 가이드라인 개정
 -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 도 단위와 특·광역시 단위로 구별하여 제시하고, 시·군·구 단위에서도 도시 규모별로 업무내용을 차별화하여 제시

심경미 연구위원 (044-417-9654, kmisim@auri.re.kr)

장민영 부연구위원 (044-417-9870, myjang@auri.re.kr)

이혜원 연구원 (044-417-9825, hwlee@auri.re.kr)